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0년 10월 29일 (목)

**CONTENTS**

-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
- 정당성을 상실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관광업계 피해 현황 및 시사점

# 이슈브리프

(IB 2020-12)

---

## CONTENTS

I.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 / 1

II. 정당성을 상실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 10

III.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관광업계 피해 현황 및 시사점 / 18

---

발 행 인: 지상욱

편 집 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윤식, 나경태

편집간사: 김진솔

발 행 일: 2020년 10월 29일

발 행 처: 여의도연구원

인 쇄: 디엔시파크

# Contents\_

금주(10월 5째주)는 노동개혁, 탈원전, 여행업계 현황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최근 노동개혁 관련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노동시장 현실에 맞는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2편에서는 주요국 원전정책 분석, 탈원전 강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당 차원의 에너지 정책 마련 등에 대해 다뤘으며, 제3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여행관광업계 피해현황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 제1편: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

지난 10월 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을 입법과제로 제안. 제안 배경, 정치적 함의가 무엇이든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개혁대상인 점은 분명. 강자 독식구조,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노동시장은 헌법정신에서 괴리된지 오래이며 노동법 체계는 기술 혁신, 인구감소 등 시대적 변화 흐름에 뒤처져 새롭게 출현하는 고용형태와 이에 소외된 다수 근로자를 포용하기에 한계에 봉착. 노동개혁 난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논의 기반으로 △기술 및 시장 친화적 노동법 질서 정립, △미조합원, 실업자 등 아웃사이더 권익 강화, △노동기본권·공공이익이 조화되는 법체계 정비 등을 개혁의 방향타로 설정할 것을 제안함

## 제2편: 정당성을 상실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김진솔 연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서 탈원전을 위한 경제성 조작 등이 밝혀졌음에도 정부·관계 부처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공언. 원전을 저탄소·고효율 에너지로 인식, 안정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행보와 배치. 탈원전을 추진했던 프랑스, 대만 등도 경제적 요인,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탈원전 시간표를 조정. 文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대, △원전수출 경쟁력 약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에너지안보 위기 현실화 등 부작용이 불가피. 따라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동시에 ‘원전-신재생에너지 투트랙 전략’ 등 당 차원의 에너지정책 수립이 요망됨

## 제3편: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관광업계 피해 현황 및 시사점 (나경태 사회문화정책실장)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업종이 피해를 입었으나, 그중에서도 여행관광업계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 전세계 관광객이 65%(2019년 대비) 급감한 영향으로 소규모 여행관광업뿐 아니라 대형 항공 여행업도 대부분 개점 휴업인 실정. 문화관광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지원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업계 피해액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 이에 당 차원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여행관광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 책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

## II. 정당성을 상실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작성: 김진솔 연구원 (kim.jin.sol@ydi.or.kr)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서 탈원전을 위한 경제성 조작 등이 밝혀졌음에도 정부·관계부처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공언. 원전을 저탄소·고효율 에너지로 인식, 안정적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행보와 배치. 탈원전을 추진했던 프랑스, 대만 등도 경제적 요인,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탈원전 시간표를 조정. 文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대, △원전수출 경쟁력 약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에너지안보 위기 현실화 등 부작용이 불가피. 따라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동시에 ‘원전-신재생에너지 투트랙전략’ 등 당 차원의 에너지정책 수립이 요망됨

### 1. 현황

- 10.20(火),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결과가 13개월만에 발표
  - 2018.6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추진
  - 2019.9月 국회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
    - △친여 감사위원과의 입장 충돌, △피감자들의 진술 번복, △여권의 조직적 공격 등으로 감사결과 발표가 역대 최장기간 지연
  - ※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3개월 내 결과를 국회에 보고, 필요시 2개월 연장요청 (총 5개월)
-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이 밝혀지면서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비판여론 비등

- 보고서는 한수원이 전기판매단가, 평균 가동률 등 경제성을 낮게 산정했을 뿐 아니라 인건비, 수선비 등 과다하게 부풀린 정황을 지적
    - 전기판매단가를 (2018년) 55,960원, (2019년) 52,670원(Mwh(메가와트시)당)으로 전망했으나, 한국전력거래소 따르면 (2018년) 62,092원, (2019년) 56,074원에 판매
    - 평균 가동률 54.4% 이하로 전망했지만, 35년간 평균 가동률은 78.3%
  - 한편, 감사원은 “정책 결정은 감사대상이 아니다”며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는 결론을 짓지 않아 ‘탈원전 면죄부’ 감사라는 일각의 비판
- 하지만 정부·관계부처는 감사결과와 무관하게 탈원전 기조 유지를 예고
-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기폐쇄는 문제없었다”며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을 공식 발표
  - ‘탈원전 시간표’에 따라 2023년부터 기존 원전이 연장없이 차례로 폐쇄될 예정인 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이 긴급

〈표 II-1〉 월성1호기 관련 논란일지

날짜	주요 내용
2009.4월	한수원, 노후설비 개선위해 5600억여원 투입
2012.11월	설계수명(30년) 만료돼 가동중단
2015.2.27	원자력안전위원회 계속 승인: 2022년까지 가동 연장 결정
2017.10월	정부 <에너지 로드맵> 발표: 노후원전 수명연장 불허, 신규원전 백지화
12.29	정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공급계획에서 월성1호기의 설비용량 제외
2018.6.15	한수원 이사회, 경제성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2019.9월	국회,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요청
12.24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2019.12월말	감사원, 감사기한 1차 연기
2020.2월말	감사원, 감사기한 2차 연기 (법정시한)
4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보류 결정: 담당 국장 교체, 재조사 지시
10.7~10.13	감사위원회, 최종의결위해 총 4차례 회의, 의결 불발로 정회(10.13)
10.16	제5차 감사위원회 소집(최종의결 예정)
10.20	감사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 및 공개

\* 출처: 언론발표 취합

## 2. 주요국 원전 정책 현황<sup>1)</sup>

- 미국: “원전 수명 80년까지 연장 추진” (전체 133기 중 96기 가동중)
  - 미국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에 20년 추가연장을 승인한 바, 기본 설계수명 40년인 것을 감안하면 원전 1기를 60년 이상 사용하는 셈
  - 나아가 2010년부터 원전산업계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전 80년 가동 방안을 추진하며 2017.7월 심사지침서를 마련
  - 한편, 폐쇄된 일부 원전(8%)은 셰일가스 개발 등 가격경쟁력 약화, 전력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
  
- 프랑스: “10년 늦춘 원전 감축 계획” (전체 58기 중 56기 가동 중)
  - 2018.11월, 마크롱 대통령은 전력공급 안전성, 경제성을 이유로 전임 정부 올랑드 정권의 ‘원전 축소 계획’을 10년 늦추기로 결정
  - ※ 2012년 프랑스는 ‘다년도 에너지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가동원전 58기 중 14기 폐쇄, △원전발전비율 75→50% 감축, △폐센하임원전 1·2호기 조기폐쇄 등을 추진
  - 마크롱 정부는 원전 가동을 유지하되 석탄 화력발전소 4곳 폐쇄, 친환경 에너지 생산 증대 등을 함께 추진,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
  
- 대만: “국민투표로 탈원전 법조항 폐기” (전체 6기 중 4기 가동중)
  - 2017.1월 차이잉원 총통은 탈원전 관련 법안을 통과, 원전 전체 6기 중 4기 가동 정지,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정책 추진
  - 2018년 국민투표에서 국민 59%가 ‘원전 부활’을 찬성, 결국 탈원전

1) 감사원, “감사보고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국회감사요구)”, pp.13-19.(2020.10)

관련 법조항이 폐기됐으나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 논란

- 2017.8월 화력발전소 사고로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전기료 인상 등으로 악화된 여론이 국민투표 결과로 이어짐

○ 독일: “탈원전을 위한 차악 선택” (전체 36기 중 6기 가동중)

- 독일 정부는 日 후쿠시마 사태 이후 2022년까지 원전 전면 폐쇄를 결정, 연간 평균 320억 유로(약 42조원) 예산이 들어가는 에너지전환 (Energiewende) 정책 추진 중

※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수요 65%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골자의 탈원전 정책

- 하지만 대체에너지 확보하지 못한 채 탈원전을 추진, △화석연료 의존도 상승, △전기료 대폭 인상,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부작용 발생

※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은 탈원전 정책 시행 전인 2010년 대비 약 28% 상승 (2019년 기준)

[그림 II-1] 연간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

(단위: kWh당 유로센트)



\* 자료: 독일에너지수자원협회(BDEW)

### 3. 탈원전 정책 강행이 가져올 부작용

#### ① 전기료 인상 현실화... 소비자 부담 가중

- 전력공급 축소 등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文정부는 전기료 인상률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 바 없음
  - 한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료 인상률은 2030년 23%, 2040년 38%, 전기료 인상 누적분은 2030년까지 83조원, 2040년까지 283조원으로 추산(2017년 대비)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원전설비 비중이 2020년 19.2%에서 2034년 9.9%로 축소될 예정이나,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
- ※ 2019년말 기준 에너지원별 설비비중은 △원전 19.2%, △석탄 27.1%, △LNG 32.3%, △신재생에너지 15.1%인 한편, 발전량 비중은 △원전 25.9%, △석탄 40.4%, △LNG 25.6%, △신재생에너지 5.2% 등

#### ②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국가경쟁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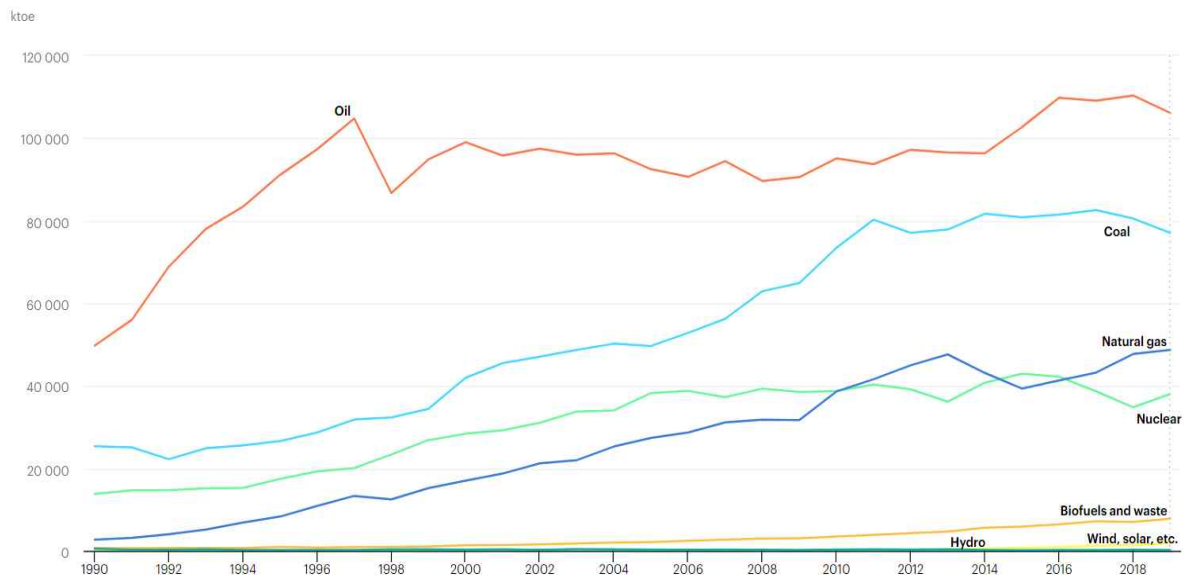
-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 짧은 공기(工期), 가격경쟁력 등으로 원전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
  - 미국 이외 국가에서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인증을 받은 사례는 한국이 유일 (한국 3세대 원전 APR 1400)
- 본국에서의 원전 가동 현황이 원전수출국의 기술수준을 의미하는 바, 탈원전은 원전 수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의 원전수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등이 공격적으로 원전수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



### ③ 화석에너지로 부족분 충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 2019.11月, 유엔은 <배출량 격차 보고서(EGR) 2019>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달성의 장애요인은 탈원전 정책”이라고 지적
  - 文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발전부문 배출 감축 폭을 당초 6,450만t에서 2,370만t으로 축소
- 탈원전 정책 이후 원자력 발전량 감소에 따른 전력생산 부족분을 석탄, LNG로 대체한 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 추세

[그림 11-2] 1990-2019 한국 에너지 공급원



\*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홈페이지(<https://www.iea.org/>)

-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자력을 “저탄소에 기여하는 청정에너지”라고 정의,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원전 투자를 줄인다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
  - 2019.9月, 중국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원전을 110기까지 확대하겠다는 ‘원전굴기’ 계획 발표

#### ④ 코앞으로 다가온 에너지안보 위기

- 무(無)에 가까운 부존자원, 90% 이상의 에너지 의존율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
- 지질·지형 특성상 태양광, 풍력만으로 전력 공급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원전 유지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사안
  - 9.18(金), 파티 비를 IEA 사무총장은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의미, 원전 대체기술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
- 한편, 유럽 내 24개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는 독일도 탈원전 정책 이후 대정전 위기에 직면, ‘에너지 섬’인 한국 사정은 더 심각

## 4. 시사점

- ‘월성 1호기 조기폐쇄’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부당성이 드러났음에도 文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을 예고한 바, 경제, 산업, 환경 등 전방위적 피해가 예상
  - 감사결과로 ‘탈원전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증폭,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
- 따라서 정부여당의 ‘마이너스 환경·에너지정책’과 차별화된 당 차원의 에너지전환 정책 마련을 위해 다음을 제안
  - 첫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신재생에너지 투트랙 전략’ 제시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한 에너지 수급이 현실화될 때까지 기존 원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 둘째, 에너지전환 연착륙을 위해 원전안전성 확보 및 가동수명 연장
  - 최근 3년 한빛 1·2호기, 고리 2호기 등 기존 원전 설비개선 취소 사례는 총 52건으로 부품 교체, 설비 개보수가 적기에 되지 않고 있음
- 셋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을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활용
  -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 대신 LNG발전 늘리겠다고 했지만, LNG발전은 질소산화물 (NOx)을 배출, 미세먼지, 오존 등을 생성하는 비친화적 에너지원
- 특히,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환경 피해, 에너지 수급 문제 등으로 주요국들은 에너지 효율성, 환경적 요인 등으로 원전을 유지
  - 탈원전, 원전축소 정책을 시행했던 국가들도 전기료 상승, 온실가스 배출 증가, 국민 여론 등으로 탈원전 시간표를 늦추고 있음
  -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대상이 아닌 부품 교체, 설비 보강을 통해 안전성 확보 후 수명연장하는 것이 추세임을 강조

---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